

동이의 성적 권리가 되려면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동의를 통한 성적 권리 실현을 어렵게 합니다. 법 제도와 사회적 규범이 소수자가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손해에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소수자가 성적 즐거움을 찾고 성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문화, 코드를 펼쳐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 성폭력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합니다. 성적 욕망과 실천이 유성애 중심으로 규범화된 사회에서 무성애자가 자신의 욕망과 실천을 언어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는 HIV 감염인의 섹스를 금지하는 법으로 기능하고, 질병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낙인과 함께 HIV 감염인이 적극적 합의 소통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처럼 성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생산하는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이가 권리로 이어지려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없애고 성적 동의를 말하는 사회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동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담소는 즐거움의 출발점으로서 '적극적 합의의 토대'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이 토대의 핵심은 서로의 권력의 차이를 해소해 가며 평등을 실천하는 가운데 상호간에 성적 즐거움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적 동의가 단지 YES or NO의 일회적 선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가고 서로의 욕망에 대해 충분히 듣고 질문하는 과정으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나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관계 속에서 함께 안전과 즐거움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적 활력을 긍정하면서도, 관계윤리로서 성적 동의를 만들어가는 것은 스스로에게 힘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나의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을 건강하게 짓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때 #충분한 이해와 정보 #평등하게 #모든과정에서 항상

비동의 강간죄

LGBTQ+

권리 버전

Q&A

폭행·협박 구성요건 왜 문제야?

현재 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상식과 달리 동의하지 않아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으면, 법이 강간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분석 결과(2019)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은 71.4%에 이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용, 승진, 평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신뢰와 애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피해자가 술이나 잠에 취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 없이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폭행과 협박을 각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은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또 다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고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폭행과 협박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피해자의 저항 여부만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관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편, 피해자가 성소수자인 경우, 커뮤니티 내에 정체성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폭행 및 협박”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맞지 않고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및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법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자_동의여부로 

비동의강간죄는 이성애 관계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에만 해당할까?

법적으로 ‘강간’이란 이성 간 성기 삽입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무슨 죄로 처벌할까요? 이러한 행위는 유사강간죄(형법 297조의2)가 적용됩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해야 하며,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보다 가벼운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성폭력 법체계는 강간을 여성의 정조를 침해한 죄로 인식한 옛날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성적 침해임에도 동성 간 강간은 이성 간 강간보다 더 낮게 처벌되는 셈이죠.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류호정 의원이 비동의강간죄 관련하여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898)은 유사강간과 강간 등으로 분열된 성폭력 관련 법체계를 재정비해 강간죄로 통합하고, 법의 성립요건에 동의 여부를 포함합니다. 성폭력 피해의 위계를 나누고 동성 간 성폭력을 사소화하는 이성애중심적, 남성중심적인 법의 개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폭력 관련 법에 있는 낙인과 차별 또 뭐가 있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제 중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인 추행죄는 군대 내 성폭력의 발생원인을 고도로 위계화되어 있고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이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의 문제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이 호모포비아 이성애자 남성애에 의해 발생하고, 그 피해자는 동성애자 남성이라는 일관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추행죄’가 유지됨으로써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등 국제 인권 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작년 4월 대법원도 동성애 혐오에 기초한 종래의 해석을 폐기했습니다. 이처럼 성소수자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군형법 제 92조의6 ‘추행죄’를 폐지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